

동북아의 화해(和諧)와 공생(共生) -역사교과서의 수정과 공동연구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김승일(동아대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목 차
1. 머리말
2. 화해와 공생의 인식론
3. 역사교과서의 비교 검토와 개정 방안
4. 역사 연구의 모순과 극복을 위한 제언

1. 머리말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적인 기운이 서서히 동북아지역으로 모여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비단 경제적인 발전에서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세계 정치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정신적 가치는 오늘날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서국적인 개인주의와 패권주의에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주의로써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가 동양사상의 기본 골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요소를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말이 바로 화해와 공생이라는 말이다.

화해는 원칙적으로 고대 동양에서 비롯된 말이고, 공생이란 17세기 유럽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두 단어가 각광받고 있는 것은 점점 정치적, 경제적, 기후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누구나 주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세계는 거의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실정이다. 지구 어느 한 곳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 여파는 곧바로 전 세계에 미치고, 그것의 연쇄적 반응을 통해 곧바로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G2에서 비롯된 회의가 G7, G8을 거쳐,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것과 같은 G20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제는 강대국 몇 나라가 세계를 아우르는 시대가 지나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창되고 있는 말이 화해와 공생인데, 이러한 사회로의 지향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부터 이를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올바른 과거 청산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서로가 반목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역사적 과오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화해와 공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재 동북아지역에 요구되

어 지고 있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 그동안 행해왔던 과거 청산 경험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과거 청산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편찬해야 하는지, 공통적 인식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동북아 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공동연구의 방법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화해와 공생의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법을 찾아보고, 이러한 극복 방법으로써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공동연구가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하여 향후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공동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화해(和譜)와 공생(共生)의 인식론

이 세상에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오붓하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문화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도 있었지만 오히려 치고받고 하는 경쟁관계를 통해 서로의 자존을 지켜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 더 강하게 인식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의 주변국에 대한 악전고투의 역사가 뇌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원인은 우리의 국토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인해 중립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주변국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도 동북아 삼국의 공통적 이념 즉 「화해」와 「공생」을 위한 시스템이 와해되는 경우에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와 공생의 이론적 기초는 동양사상에서도 그 기초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이념을 직접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실천력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에 있어서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한 망상으로 동북아 삼국은 21세기 첨단사회에서조차도 이러한 역사의 그늘을 지우지 못하고 세상이 열망하는 동양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역사 해석에서의 갈등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와 해결방법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논문 또한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전지전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갈등의 원인과 그 배경 분석을 통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 지 등에 대해 탐색해 보고, 동시에 최근 가장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을 공동연구라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성립한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의 모순점 분석을 통해 진정한 연구방법론을 제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화해」와 「공생」의 의미부터 정립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해(和譜)」라는 개념보다는 「화해(和解)」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화해(和解)」란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 보면 “관용을 베풀어

풀려고 하면 저항하지 않게 된다(寬和不拒下也)”는 의미로서 즉 “싸움을 그만 두고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이미 양자 간에 싸움이 있던 것을 좋게 풀어낸다는 사후책적(事後策的)인 말이다. 이에 대해서 「화해(和諧)」라는 의미는 『시경(詩經)』에서 말한 것처럼 “황후나 왕비가 군왕을 즐겁게 해주는 덕이 있다면 화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后妃說樂君子之德, 無不和諧)”고 했고, 『사마상여(司馬相如), 금부(琴賦)』에서 “서로 교류하여 인정이 통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화목해진다(交, 情通, 體心和諧)”고 한 것처럼 「화해(和諧)」란 “조화(調和)하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むつびあう)”와 같은 말로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리 서로가 미덕을 발휘하거나 교통하여 잘 이해하게 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전책적(事前策的)인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사회에서 항상 불안적 요소로 도사리고 있는 빈부의 갈등, 권력과 비권력의 갈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양심과 비양심과의 대립,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책임 「화해(和解)」보다는 사전 책임 「화해(和諧)」 정신을 선양하고 납득케 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和諧) 정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공생(共生)」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인식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공생」이란 어떤 정신인가를 살펴보자.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안정되고 강력한 힘의 주체자가 되어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의지력(毅志力)을 가지고 법으로써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실천을 통해 평등과 안정을 구현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자는 정신이다”

이러한 「공생」의 정신은 고대 중국의 법가사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날 인류에게 요구되는 「공생」정신의 직접적인 화두는 독일의 알토지우스(althusius, 『인민주권론』, 1614)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념은 가족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사회적 규모로 확대해서 제 단체, 지방, 나아가 국가로까지 미치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적으로 말한다면, 법이 지배하는 다원적인 연방국가론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는 자연법으로서 국제법의 지배가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이런 주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절대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권력 강화가 진행되어 갔던 시대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고하기 위해서였다. 알토지우스가 이를 주장한 목적은 철저하게 법으로써 권력을 통제하는 정치학과 법학을 추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하여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와 주권자로부터 주어진 집행권을 누가 갖는가는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무엘서」 상 제8장-10장에 근거하여,

“나는 인민(peplus)을 보통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體)로 결합된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파악한다. 따라서 인민은 왕국 혹은 국

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즉 같은 활동, 같은 생업, 같은 천직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해가며 생활하는 중에, 각 개인의 방법을 통해 무엇인가 공통하는 것을 함께 보유하려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결합되어지는 것이므로 결합체의 주인은 바로 인민이다”

라는 인민관(人民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자연법적으로 주어진 인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는 인민은 법이 규명하는 이외의 권력(국가, 통치자, 기관 등)에 구속받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상호 우정과 호의 하에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류가 「공생」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이유를 증거 하였다. 즉

“인민은 사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인민은, 이미 단순히 「자연사적으로 관찰된 현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책임자」인 「법적 조직체」(Rechtsgebilde)이기도 하므로 누구나 법 안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향유할 수 있다”

고 했던 것이다.

바로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것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로 부터도 구속을 받거나 방해를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포함한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절대로 「화해」와 「공생」의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화해」와 「공생」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겠는가를 주제로 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만들기를 위한 하나의 제언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역사교과서의 비교 검토와 개정 방안

(1) 역사교과서 개정의 필요성

동아시아에서의 상황은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더 빠르게 재무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투기인 24SU-27s와 발표되지 않은 MiG-21s에서부터 잠수함과 심지어는 항공 수송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응하여 타이완은 150대의 F-16 제트전투기를 미국에서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된 전투 폭격기 60대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이는 등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100만이 넘는 상비군을 가지

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고, 거기에 핵까지 보유하게 되어 그들의 호전성이 더욱 과감해 지고 있는 관계로 주변국의 뿔머리를 썩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 60만이 넘는 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군사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쟁 이후 평화주의자처럼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왔다.

이렇게 됨으로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서유럽의 유럽공동체 같은 지역적 기구가 없는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 각 나라는 군사력 증강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시아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대면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불안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역사교과서 공동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또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 학자들의 생각은 첫째 국가적 자신감의 성장(특히 민족주의에 대한 불식)과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내용 가운데서 상호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전후 세대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 한다는 점과, 둘째 서유럽 각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어떤 일을 해 왔었는지, 어떻게 역사교과서를 개정해 왔는지 등 서유럽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 고찰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 중심점은 역시 서유럽 각국의 역사교과서 개정 작업이 얼마나 그들의 정신적 단일화에 기여했는가를 밝혀내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서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문화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통합을 이루는데 공헌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동아시아에다 그러한 유럽인들의 경험을 연계시켜 역사교과서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노력해 온 것이었다.

(2) 유럽에서의 교과서 개정 경험

서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로 알려진 경제적 기구의 시초가 되었던 하나의 구체적인 성취로 이어졌는데, 이는 다시 서유럽의 통합을 향한 운동의 형태로 이어져 민족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게 했다. 이 초국가적인 기구는 곧 유럽경제공동체(유럽공동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음)를 설립하기 위해 더 확장되었는데, 이는 근대 유럽에서 국제적인 협동에 가장 효과적인 인간 간의 노력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파괴와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세력의 쇠퇴는 열광적인 민족주의(나치즘과 파시즘)의 포화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경험하여 알게 된 모든 요소는 유럽인들로 하여금 경제 통합을 향한 움직임을 가져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멸적인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구라파의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쇠퇴, 게다가 가장 강력한 요인인 광적 민족주의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 근대 민족국가였던 유럽인들은 서로를 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서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 이

들 민족주의의 폐해를 보면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 이들 모든 강력한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유럽인들 뇌리에 의식화 되어 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럽 사람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은 1949년(유럽 공동시장 설립보다 9년 앞선 시기)에 그들의 공동 유산인 이상과 원칙들을 깨닫고 산업보호의 목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보다 큰 화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공식적으로는 유럽회의라고 알려진 다국적 자문기관을 설립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안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유럽의 학교와 대학에서 전쟁 전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큰 책임이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서, 유럽회의는 그 자신과 후에 생긴 문화적 협력회의를 통해 전쟁 전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개정 하는 작업에 관해 유럽 국가들 간에는 쌍무 회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 이 회의의 구성 국가들의 역사책들은 모든 유럽 국가들의 역사 내용을 올바르게 실리기 위한 범위를 점검하기 위해 6자 회담(1953년과 1958년 사이)을 준비하였고, 역사교과서의 질 향상을 향한 적극적인 단계를 취해 나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럽 회의는 전쟁 전의 역사를 다룬 역사교과서를 정화(눈에 확 띄는 왜곡, 그릇된 설명, 편파적인 고장관념들, 고의적 생략들의 제거를 통해)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업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사적 객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양한 국가들 간에 양자 접촉과 문화적 협정을 조장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유럽회의는 유네스코처럼 많은 성공과 함께 협력의 촉진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역사교과서를 상세히 개정하고 구체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54년 프랑스-독일 간에 체결된 문화적 협정을 들 수 있다.

이 문화적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선언했다.

“양국의 법 안에서, 양국이 뜻하는 바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시스템의 모든 기구를 동원해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평가 요소와 양국의 감성적 특성의 미덕을 통해서, 두 나라 국민 사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양국 간의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국은 모든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을 결의한다.”

이 협정은 뒤이어 일어나는 많은 유사한 양자 협정들의 모델로써 작용했는데, 이 프랑스-독일 간에 체결된 문화적 협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이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적이었을 지라도, 그들은 이전의 과거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견 타결을 통해 우호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삼국 사이에서 그러한 양자 혹은 다변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프랑스-독일 간 협정은 정부들 간에 작성된 서면으로 된 서약의 행위 뿐 만 아니라, 교과서 개정 작업과 또 다른 방향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변적 활동들을 통해 통합된 유럽 국가들의 관심과 삶을 보기를 희망했던 수많은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가,

역사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작업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프랑스-독일 간 문화적 협정이 서명된 직후에, 프랑스 역사와 지리 교사들이 연합한 단체의 당시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교사들은 두 나라의 교과서에서 특정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던 방법을 함께 조사하기 위해 1950년 이래 매년 만남을 가져왔다. 프랑스와 독일 역사가들은 그리하여 객관적인 역사적 연구를 실행하고 교과서로부터 어떠한 감정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1954년의 협정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 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국제적 교과서 개정 작업에 포함된 활동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다양한 세계평화운동과 연관해서 개인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관심한 정부에 의해 계속해서 억압 받아야 했던 이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일반 대중 혹은 역사에 관심을 가진 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들은 각자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을 진 유럽 국가들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회가 실용적, 문화적, 도덕적인 유럽의 통합을 향한 상호 이해와 친선의 증진에 목적을 둔 역사가들과 교사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물론 이 조직은 정치성을 띠지는 않았다. 오늘날 서유럽에서 다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개정 작업은 정치와는 구분하여 협력적인 초국가적 활동을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새로운 서유럽의 탄생은 사실상 국가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국가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으로써 모든 인간 활동의 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활동들 중 많은 것들이 지역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작업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진 협력적인 다국적 교과서 개정을 포함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위해 서유럽에서 시작된 프로그램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훌륭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이해와 친선, 그리고 협력 증진을 위해 서유럽처럼 대등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3) 교과서 개정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문제점

세계 어떤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유지와 종속 보존을 위한 태도와 신념의 보급과 고취, 그리고 그들 자손 대대로의 전달을 촉진시키는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교육을 가장 중요시 하는, 오랜 시간을 통해 확립된 유교의 전통 때문에 동아시아의 학교구조는, 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의해 소중히 여겨지는 목표, 가치, 태도의 보급자와 전달자로서 광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교육과 함께 역사교육은 미래세대를 형성하고 과거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서 동아시아의 민족국가들에 의해 고려되어 졌다. 즉, 민주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여부에 관계없이, 민족국가는 각국의 교육부 등 각 교육부

처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알맞게 만들어 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각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을 특별한 책임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역사교과서 개정의 임무는 민족주의가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하에 남아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막대한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주의국가였던 동아시아인들의 전쟁 전의 경험은 유럽인들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동아시아에서, 집단적인 정부의 권력과 그리고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 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시대 초기의 French prototype(프랑스의 원형)과 비슷하였다.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윌슨의 이상(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모든 민족 집단이 통일과 독립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을 반영하는 국가적 독립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 속에서 민족주의가 처음으로 자신의 특징적인 표현방식을 발견했을 때, 20세기 초 아시아에서 민족주의는 비로소 이로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동아시아인들은 민족주의가 이질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예를 들어, 전쟁 전 유럽인들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경험했던 폭력적인 파시스트 운동, 그리고 30, 40년대에 일본인들이 겪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군정통치) 외세의 지배로부터 국가의 해방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을 옹호하는 민족주의는 동아시아인들에게 예전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문화의 정체성을 촉진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렬한 요구 속에서, 역사가들과 역사교과서 편찬자들은 그들의 국가를 가장 우호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려는 보편적인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들은 종종 그들의 이웃나라를 이용하여, 즉 그들 이웃나라의 이미지를 비하하는 동시에 자국의 국가적, 문화적 의식을 보이게 함으로써 자국의 역량을 증진해왔었다. 역사교과서에 적용된 위와 같은 국수주의적인(혹은 민족중심적인) 기술방식은 우매한 민중들을 다른 인류로부터 고립시키고 특정한 국가적 경계 안에 묶어놓음으로써 그들에게 국가적인 결속감에 대한 초이성적인 감각을 발생케 하고 조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오늘날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

한 실험은 민족주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대중을 열광시키고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근대의 많은 국가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독립을 얻어냈다. 역설적이게도, 일반적으로 민족중심적이고 외국 혐오적인 민족중심 운동일수록, 더 인기 있는 지지를 얻는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은 또한 밝혀냈다. 따라서 이를 논리적으로 확장해본다면, 역사교과서의 기술상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되면, 불행한 괴롭힘을 당했던 구세대와 많은 관련이 있어왔던 손실을 극복케 하고, 어린 세대에게 국가적 정체성의 성장과 동아시아의 현대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역사는 나폴레옹전쟁 이래 실질적으로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의 정도 변화는 있어 왔지만 그 후과가 있어 왔음을 증명해 주었다. 즉 핵 확산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 초강대국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작은 나라들(이란, 북한 등)까지도 전례 없는 파괴적인 핵무기로 이미 무장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인류의 멸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인류가 반드시 평화와 조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처해 있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민족 중심주의의 신념을 주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것인지, 나아가서 개정을 통한 역사교과서의 질을 증진시켜 미래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면서 성장을 도모케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국의 보존과 영속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많은 수단들 사이에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타 국가를 비방하거나 평가절하 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사실, “melting pot situation(여러 문화가 뒤섞인 상황)” 하에서, 주류 민족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고, 그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불합리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불가피 하게 발생시키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실험에서 증명하였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가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국의 국가적 문화적 전통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제적 이해와 협력의 필수 조건인 타민족 또는 민족 집단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해는 국가적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항상 다투게 되지만, 결코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역사교과서 개정 시 공동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공동으로 지켜야 할 연구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적 이해와 실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시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해 주었으면 한다..

1) 과학적인 역사 연구법은 역사가들이 그들의 선입관을 인식하고, 그들의 작업으로부터 편견적인 영향을 제거토록 노력하며, 정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이는 증거들에 의해서만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기록물로부터 자료를 평가하거나 이용할 때, 교과서 집필진들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왕실의 연대기들은 왕실역사가들이 들어내기를 원했던 것과 숨기려고 했던 것 모두에 대해서 조사되어야 하는 반면에, 왕실은 자신과 국가를 가장 호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옛 황제의 칙령이나 선언 등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설사 정확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독립되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독립된 사건들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무지에 의해 일어난 일일 지라도, 독립된 사건만을 제공하는 것은, 때론 다른 나라를 비하하게 되는 반쪽짜리 진실만을 이야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약간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와 고조선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발발에 대해 참고해 보자면, 타이완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은 고조선의 왕이 한나라의 사절을 살해했고, 전한(前漢)과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한나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했다고 말하면서, 옛 고조선의 왕인 우거(右渠)를 비난하였다. 그런 이유로 황제 무(武)는 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두 개의 독립원정군을 파견하였다. 고조선이 정복된 뒤에, 황제는 영토를 한나라의 네 개 지역(낙랑, 임둔, 현토, 진번)으로 분할하였다.

이렇게 기술한 이 역사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아마도 사건의 출처로써 서한(西漢)의 황제 무(한 무제)의 연대기를 이용했을 것이고, 이러한 그들의 설명은 부분적인 출처와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정확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어린이들이 고조선의 왕이 중국의 사절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그런 극악한 행위는 한국인 같은 야만인들로부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의 어린이들이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그 사건에 대해 들었다면, 그 영향은 매우 다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 무제의 황실에서 일한 저명한 역사가인 사마천에 의해서 쓰여진 『사기(史記)』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저명한 한나라의 역사가에 의하면, 문제의 한나라 특사는 먼저 그를 호위하던 고조선의 왕자를 고조선 밖으로 끌어내어 왕자를 암살하였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고조선의 장군을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비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이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특사에게 요동(遼東) 지역의 동부사령관의 자리를 수여하였다. 왜냐하면 용맹한 고조선의 장군을 살해했다는 것이 황제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켰기 때문이다. 그 특사가 자신의 새로운 자리를 위임 받았을 때, 위와 같은 모욕에 분노한 고조선 왕은 그의 부대를 출격시켜 그 특사를 공격하고 죽였던 것이다.

사마천에 의한 ‘한 군사 통치자의 살해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이 이야기는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전쟁의 명분을 제공해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사마천에 의한 균형 잡히고 객관적으로 설명된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한전쟁을 일으켰던 전체 사건을 모두 생략한 중국역사와 개정판 중국역사인 중국 교과서에 대해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후자(개정판 중국역사)는 기원전 1000년 이래의 한중일 삼국 사이에 존재했던 밀접한 문화와 교류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반면에 중학교 국사는 한나라 특사의 살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한 것에 관해서는 경제적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논하고 있다. 고조선은 요동반도부터 한반도의 북동부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과 한반도 남부지역들 간의 무역관계(외국무역들은 고대 조공제도의 체제 안에서만 처리되었다)들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의 왕과 관리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무역중계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관세제도의 붕괴에 분노한 한나라는 고조선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역사책 『조선역사』는 사마천에 의해 직접적인 개전의 이유로 여겨졌던 한나라 군사령관의 살해에 대한 언급은 삼가한 채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의 정복을 중국의 대 제국주의 계획의 일부로 다루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동안 한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기다리며 우리의 고조선도 또한 정황을 주시했다.” 대체로 이 교과서의 저술자는 사마천의 시각의 주요 맥락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교

과서는 주변국가들 간의 보다 넓은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인 단어와 문장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론적으로 객관적인 역사교과서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호의적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는 주변 국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여겨지는 그 나라들의 문화와 다른 성취들도 언급함으로써 그들과 그들의 역사를 바르게 나타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발명품인 종이, 점토와 나무로 연이어서 만들어 졌던 휴대용 인쇄기,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 그리고 한국의 발명품으로써 등자와 구리, 납 등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화약, 그리고 일본의 노구치 히데오에(野口秀雄) 의해 발견된 의학적 성과인 황열병과 매독을 일으키는 파상균과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같은 것들은, 인류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한 수많은 인류의 노력들 중 일부이다.

한 국가의 어린아이들이 다른 나라가 문화적, 기술적으로 성취한 것들을 학습 할 때, 낯은 편견과 불건전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문물들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4). ‘조공’과 같은 용어들은 교과서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동시에 제거되어야만 한다. ‘조공’이라는 용어는 순전히 국가적인 자부심 때문에, 한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 대신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 초기에는 몽골 대초원지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값싼 형태의 보험으로 흉노족 통치자에게 이러한 조공을 바쳤다. 해당지역에 중국이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기원전 1세기에 봉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이웃국가의 통치자와의 관계인 “조공관계”로 변환되었는데, 중국의 황제는 이웃 통치자의 우월성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인식하에 비싼 값의 재화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오늘날의 “대외 교역”과 비슷한 조공무역을 통해서,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한 국가를 속임으로써(예를 들어, 북쪽의 흉노에 대응하기 위해 남쪽의 흉노를 지원한다거나, 또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 중국의 황제는 중국 주변에 있는 대체로 불안정한 이웃국가를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공제도는 결국 대외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영구적인 기준으로 전개되었고, 본질적으로 현대의 국제법상에서 실현된 모든 국가의 평등에 대한 사상과 모순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동안에 조공제도는 중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의 가장 심각한 마찰을 일으킨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몇몇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아직까지 ‘조공’과 같은 공격적인 전통적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뚤어진 전통적 용어는 만성적인 고질병처럼 자손대대로 전해지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사교과서를 막론하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자료는 그 선

정에 있어서 균형적이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사실을 서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들이 분석된 후에 역사가들은 어떤 사실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신중한 선택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가의 주관적 견해를 감소시킨다. 그렇지만 교과서 서술자는 방대한 자료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선택할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전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중국역사의 저자들은, 다른 나라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그들의 역사교과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의 정복”을 전부 빠뜨리고 서술하였다. 물론 포함시켜야 할 자료가 너무 많은데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그것들을 제외했다고 정당화시키는 것도 이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편향적인 역사 서술은, 편견을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모든 목적을 헛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료의 선정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현명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위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역사교과서를 검토한 결과를 놓고 다시 재검토한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원리들이다. 물론 이런 다섯 가지 원리가 모든 역사기술 방법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정확성”은 위의 원리들만큼 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정확성이 쉽게 발견되고 있고, 고의적인 생략 또한 여전히 많이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든 앞에서 말 한 것처럼, 이들 평가기준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역사교육 관계자들은 이를 수용하고 이에 기초한 역사기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는 바이다.

4. 역사 연구의 모순과 극복을 위한 제언

(1) 소위 「한일역사공동연구회」의 모순

2001년 10월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과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에서 합의한 것에 기초해서 다음 해인 2002년 3월 5일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공동연구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사연구공동계획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근거를 두는 행정계획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계획은 원래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이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낸 관계자들의 업적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식의 공동연구는 「화해」와 「공생」을 실현코자 하는 동북아의 미래지향성

과제를 풀어내는 데 엄청난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연구 방향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2) 어떠한 공동연구가 필요한가?

오늘날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일제 침략의 인식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행해졌던 일본 식민지 재판소의 재판 판결문을 하나의 예로 들어 공동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판결문에는 당시 일본 통치자 및 통치기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를 분석한다면 당시의 식민지 지배가 얼마나 모순이었고, 또한 일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모순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에서(당시의 재판이 일본인 재판관, 검사,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일본인의 주관적 역사인식 내지 그에 대한 왜곡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법학자,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식민지시대에 대한 각국의 역사인식을 종합화 내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쓸데없는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 인류적 「공생」의 길을 주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공동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공동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치시기의 식민지 법제와 그 아래에서 이루어진 판결문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일제사법부가 장악한 사법(司法)이 제대로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독립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3·1독립운동에 직면했던 조선총독부재판소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실제적으로 당시 구미제국도 일본의 근대화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만일 사법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일본인 재판관들이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3·1독립운동의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는 말이다.

3·1독립운동 당시 단기간에 약 47,000여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때의 판결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까지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1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판결문은 일제의 잘못된 식민통치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에게 철퇴를 내렸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판결문에는 피고인인 한국인이 스스로의 권리 보장과 나라의 독립 옹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엿보게 해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일본인 재판관은 이러한 한국인의 활동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처럼 192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판결문은 3.1운동의 비폭력성, 한국인 전체의 독립에 대한 의지, 일제 식민지 정책의 모순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 이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구조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구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양국 학자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주제를 가지고 공동연구를 했을 때 역사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결과를 축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공생」을 추구하는 공동연구를 하자

일제의 식민지 재판소 운용과 판결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과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식민지 한국에 설치한 재판소는 제국헌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한국의 경우 적어도 1920년 상반기까지는 법치주의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저항이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위협하기에 법치주의가 없어지고 마는데, 이는 전제적(專制的)인 강권지배(強權支配)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강권 지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판의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권 지배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연구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공동연구로써 논의되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만일 이상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 「행정과 사법의 분리」라는 시점은 지배자 내부에 있어서 강권적인 「행정」과 법치주의적인 「사법」의 차이, 혹은 이들 양자 간의 모순을 명확히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분석하게 되면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3.1독립만세의 시위운동을 「폭력에 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이 시위운동이 비폭력에 기초하고 있었음을 일제사법부가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즉 3.1독립운동은 「폭력에 의하지 않는 자제적(自制的) 행동이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인데, 이는 「위력」이 아니라 「도의」를 존중한 33인의 독립선언사상이 한국인들에게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인들은 「민족」과 「전 인류」의 「공존동생(共存 同生)하는 권리」로서의 독립을 몸으로써 주장한 것이고, 일본의 「위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도의」에 기초하여 「함께 살아가자(共生)」고 하는 호소를 읽어내지 못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바람에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은 초기의 의지대로 나아가질 못했고, “「위력(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위력」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폭력의 연쇄와 확대를 나타나게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일본의 패전에 의해서 비로소 없어지게 되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는 「위력」으로서는 불안정하고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도의」를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도의를 증명하는 연구」야말로 동아시아지역의 공동연구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교과서

1. 중국 역사교과서 :
『초급 중학과본 중국역사』 I, II, III, IV, 중국인민교육출판사, 2004.
『중국역사』 I, II, III, IV, 중국인민교육출판사, 2007.
2. 일본 역사교과서
<중학교>
『중학사회』 [역사분야], 東京, 教育出版, 2003.
『일본의 역사와 세계』, 중학교 사회과 역사분야, 東京, 清水書院, 2005.
<고등학교>
『일본사』, 東京, 山川出版社, 2003.
『고등 일본사』, 東京, 帝國書院, 2007.
3. 북한 역사교과서
『조선역사』 [고등중학교 3, 4학년(III, IV)],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2.
4. 대만 역사교과서
『국민중학 역사』 I, II, III, IV, 臺北, 국립편역관, 2003.
5. 한국 역사교과서
<중학교>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4.
<고등학교>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서울, 대한교과서, 2007.

2. 일반문헌

1. 國際歷史教科書 學術會議 『世界化時代の 歷史學과 歷史教科書』 서울, 1996年 10月
2. 『구약』 「사무엘서」
3.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 中華的世界と諸民族』 東京, 岩波書店, 1993,
4. 浜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的契機 - 朝貢貿易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 東京大學出版會, 1990,
5.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1992.
6. 余英時 『中國近世宗教倫理與商人精神』 台北, 聯經出版事業公司, 民國76年
7. 壽岳章子, 祖父江孝男 編 『無答責と答責 - 戰後50年の日韓關係』 御茶の水書房, 1995
8. 秀村欣二監修 『文明の轉換と東アジア』 東京, 藤原書店, 1992,
9. 原田勝正 『滿鐵』 1992, 岩波文庫
10. 李基白 編 『韓國史 市民講座 - 特輯 - 韓國史上的 分裂과 統一』 第5輯, 一潮閣, 1989,
11. 李進熙 『日本文化と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1995
12. 田中直毅 『アジアの時代』 東洋經濟新聞社, 1996
13. 中村哲 「歷史教科書の國際比較」 『歷史はどう教えられているか?』, 1995, 日本放送出版協會
14. 川勝守 『日本の近世』 6, 中央公論社, 1992,
15. 韓國教育開發院研究報告 RR 94-2-2 『日本 高等學校 歷史教科書の 韓國關聯內容 變化分析』, 1994.

16. Althusius, Johannes. *Politica methodice digesti*, 2. Neudru der 3: Auflage, Herborn, 1614, Scientia 1981, Cap. IX, with an introduction by Carl Joachim Friedrich,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